

혈세 투입 언제까지...공공교통 시스템부터 뜯어 고쳐라

긴급 점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 실패한 준공영제

광주시가 지난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1호선에만 1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공공(대중)교통의 역할과 기능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철도 1호선과 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서비스의 질 역시 여전히 시민으로부터 불만족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2호선의 실패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재 갖춰져 있는 공공교통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탓도 크다.

이에 따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현재 공공교통시스템에 대한 광주시의 면밀한 검토와 정비, 구조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가 공공교통시스템의 효율 극대화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광산구 수완지구, 북구 첨단지구, 서구 마북, 남구 송하, 동구 내남 등 광주의 동서남북 방향으로 주거지역이 팽창하면서 공공교통의 수요가 급증했으나, 공급에 실패하면서 불편을 느낀 시민들은 승용차를 탈 수밖에 없었다. 도시공간구조가 다핵화됐음에도 공공교통은 과거 시가지 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10개사에 대한 준공영제 재정지원(507억4900여만원) ▲저상버스 도입(22억4600여만원) ▲명령노선 손실보조금(4억9400여만원) ▲공영차고지 개선(3억9300여만원) ▲시내버스 LED 표지판 등(3억7100여만원) 등으로 버스업체와 운송조합에 538억6100여만원을 지급했다. 단순히 준공영제 재정지원만이 아니라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혈세를 주고 있다는 의미다.

준공영제 재정지원액은 지난 2014년 445억원으로, 400억원대였지만, 2017년

시, 매년 수백억 지원 불구

시내버스 서비스는 제자리

철도공사 조직 비대화도 문제

공공교통 효율화 방안 급선부

525억원, 2018년 563억원, 2019년 604억원으로 매년 40억원 정도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정차 버스업체들의 자체 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7년 95대였던 시내버스는 2010년 972대, 2013·2014년 973대, 2015·2016년 1041대로, 지난 9년간 86대가 늘었을 뿐이다. 광주시가 2015년 40대, 2016년 46대, 2017년 21대 등 최근 3년간 117대의 저상버스 도입비를 지원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마이너스'인 셈이다.

2015년에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광주송정역 수요를 대비해 광주시가 노선 신설을 요청하면서 68대의 버스가 총당됐다. 하지만 같은 해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52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4억원이 증액됐다. 광주시가 이처럼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불편신고 건수가 3757건에 달하는 등 시민의 불만족은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이 아닌 시내버스업체들만 '과실'을 얻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공사의 비대해진 조직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가 2016년 ▲무임수송(80억2000만원) ▲버스환승(24억6300만원) ▲운영자금(325억4800만원) 등의 명목으로 공사에 보조한 예산은 423억4900만원이었다. 2012년 370억원, 2015년 405억원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운영자금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15년 309억2000만원, 2016년 325억4800만원, 2017년 343억3600만원(추정)의 추세다.

2007년 10월 16일 도시철도 1호선 완전 개통 당시 2분부 2실 2단 577명이었던 조직이, 2017년 현재 3분부 6처 3실 907명이



안철수-박지원 어색한 만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왼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한 한정식집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현직 지도부 오찬 회동에 참석, 박지원 전 대표와 마주 앉아 있다. /연합뉴스

로 10년간 330명의 직원을 증원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운영시설은 그대로인데, 운영인력만 1.5배 이상인 것이다. 인력구조 역시 임원 3명, 직원 547명에 무기계약직 330명으로 비정상적이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공공교통에 대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이 지금까지 정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도시철도 1호선과 시내버스 노선의 중복, 신규 택지지구에 대한 공급 미비 등은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업체와 도시철도공사 모두 시 재정에 의존하면서 자구노력이 없고, 시는 요구하는 지원금을 줄뿐 제대로 관리·감독·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현성기자 chadol@kwangju.co.kr

극단 치단은 국민의당 내분

안대표측 "42% 통합 찬성" 호남중진 "개혁연대 출범"

오늘 '분당 갈림길' 끝장 토론 앞두고 세몰이·비난전 가열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 노선을 놓고 내용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21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것인지 정지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당내에서는 안철수 대표 진영과 호남 의원들 사이에 사실상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이날 의총에서 격론이 오가면서 사실상 분당의 길로 돌입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당내에서는 안철수 대표 진영과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는 세몰이와 비난전이 이어졌다. 안 대표 측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외연 확장을 향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날 당원 대상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알리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지난 9일 당비납부당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4%포인트)를 보면 '국민의당이 우선 연대해야 할 정당'이라는 질문에 '바른정당'이라는 응답이 49.9%, 바른정당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42.2%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호남 중진 측 관계자들은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라며 "당원이 많은 호남에 가중치를 뒀는지도 불확실한데다 슬그머니 자신들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흘리는 행태는 정말 역겹다"고 반발했다. 박주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과 관련한) 당 여론 조사를 믿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감정 섞인 설전도 오갔다. 통합파로 분류되는 이인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를 내는 박지원 전 대표 등을 향해 "애초 국민의당에 합류한 목적 자체가 달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 반대 의견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이상돈 의원을 겨냥해 "정치적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한 당원의 글을 전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비안계 의원들은 거듭 통합 불가 입장을 확인하면서 일전을 예고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안 대표 측은) 선거연합을 방해해 보수통합을 운운하면서 3당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정체성과 가치가 다른 그런 당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전정배 전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내일 의총이 끝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평화개혁연대 참여 서명을 받아 출범할 생각"이라며 "우선은 2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안 대표 진영과 호남 의원들의 충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 국민의당의 몰락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1일 의원총회는 양측이 갈등을 봉합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안철수 대표는 이날 박지원,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전·현직 당 대표·원내대표와 만남을 가졌다. 오찬 직후 송기석 비서실장은 "아마 내일 의총 결과를 보면 일정부분 정리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과연 의총에서 적절한 결론이 도출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9%...국민의당 지지율 창당후 최저 文대통령·민주당은 소폭 상승

국민의당이 창당 후 최저 지지율을 보이며 2주 연속 주요 정당 가운데 지지율 최하위에 머물렀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13~17일 성인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포인트) 국민의당 지지율은 4.9%(0.4%포인트 하락)로 2주 연속 최하위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는 7월 4주차와 10월 2주차에 기록했던 최저 지지율과 같은 수치다.

이는 안철수 대표의 '중도통합론'이 촉발한 당내의 극심한 내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호남(15.7%)에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8.3%포인트 상승하며 10%대 중반을 회복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총권력의 지지율 급등으로 50% 선을 회복했다. 민주당은 3.1%포인트 오른 51.3%로 1위 자리를 지켰다. 특히 대진·총정·세종(58.5%)에서 16.8%포인트나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0.3%포인트 내린 18.3%의 지지율을 보이며 지난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바른정당은 0.2%포인트 오른 5.7%, 정의당은 0.8%포인트 하락한 5.0%의 지지율을 각각 보였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오른 71.6%를 기록하며 3주 연속 70%대를 이어갔다. 부정평가는 0.1%포인트 오른 24.2%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4.2%였다. /박지영기자 jkpark@

해킹, 개인정보 유출 걱정마세요!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안전하십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정보자산보호가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예산, 인력부족으로 정보보호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 서비스 신청 및 문의

중소기업 정보보호의 문제점

- 정보시스템 관리 미흡 → 침해사고 발생
- 정보보호 문화 미 정착 → 정보보호 인식 부족
- 허술한 정보자산 관리 → 정보유출
- 침해사고 시 대응법 미 숙지 → 침해사고 대응 어려움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 지원내용(무료)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점검
- 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 정보보호 수준 진단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자문
- 정보보호 실무인재 양성 교육 및 인식 제고 세미나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 정보보호 컨설팅 이점

- 기업 내부 보안 수준 향상
- 해킹 위협 감소에 따른 기업 신뢰도 및 경쟁력 강화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 컨설팅 지원에 따른 정보보호 비용 절감

TEL 062)350-1121~1124,6~7

FAX 062)350-1125

E-mail, issc@gitct.or.kr

온라인 신청, http://cafe.naver.com/hissc